

최근 북한의 금융개혁 동향

- 상업은행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-

- I. 북한의 상업은행제도 도입
- II. 북한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특징
- III.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금융개혁의 필요성
- IV. 상업은행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기능 변화
- V. 북한 금융개혁의 평가와 전망

요 약

1. 북한의 금융개혁 시작 : 상업은행 제도의 도입
 - 최근 알려진 북한의 「중앙은행법」, 「상업은행법」 등은 북한에서도 금융개혁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
 - 「상업은행법」 등에 나타난 금융제도 개편 방향은 상업은행 설립을 허용하고, 조선중앙은행이 독점하던 기관·기업소·단체 대상 대출업무를 상업은행이 취급토록 하는 것
 - 과거 북한 사회주의 금융은 ①국가의 자금공급 독점, ②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제도(monobanking system), ③은행을 통한 기업 자금흐름 통제가 특징
 -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
2.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금융개혁
 - 2002년 북한은 침체된 경제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'경제관리개선조치(7.1조치)'를 단행
 - 分權化(기업의 자율성 제고), 市場化(시장기능의 도입), 貨幣化(화폐기능 활용한 인센티브 강화)에 초점을 맞춰 경제관리시스템 개선에 착수
 - 7.1조치이후 경제관리시스템 변화에 대응하여 종전의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개편이 불가피
 - 중국도 1978년 개혁·개방을 시작하고 1979년부터 금융개혁을 추진

- 북한은 2002년부터 해외연수, 세미나 등을 통해 중국의 금융개혁 및 시장경제 금융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본격 실시
- 이를 바탕으로 회계법('03년), 중앙은행법('04년), 국가예산 수입법('05년), 상업은행법('06년) 등 재정·금융관련 법령을 신규 제정

3. 상업은행제도 도입의 의의와 향후 전망

- 「상업은행법」 등 제정으로 국가의 자금공급 독점 및 단일은행체제(monobanking system)의 변화가 불가피
-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업무만 수행하고 여·수신 등 상업은행 업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상업은행으로 이관될 전망
- 상업은행은 여·수신, 국내외 대금결제, 계좌 개설, 외화매매, 금융채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
- 「상업은행법」 등의 제정에도 불구하고, 상업은행 설립 동향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
- 미국의 대북금융제재, 부실채권 정리문제 등으로 상업은행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
- 상업은행제도 도입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핵심인 중앙집권적 자금관리시스템의 완화가 시작되었다는데 의의
- 그러나 상업은행법 등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계좌개설 제한 등 사회주의 금융통제가 많이 남아 있어 아직은 불완전한 개혁
 - * 중국이 1995년 제정한 「중국인민은행법」 및 「상업은행법」과 비교하면 북한의 「상업은행법」 등은 은행의 독립성 등이 미흡
- 상업은행제도 설립이 본격화되면 화폐경제로의 진전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
- 북한기업들의 생산자금 조달·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져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
- 아울러 상업은행 대부 등으로 신용창출이 확대되어 북한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

I. 북한의 상업은행제도 도입

- 2002년 7.1조치 이후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다음 수순으로 북한의 금융개혁, 즉 상업은행제도의 도입을 기대

- 중국의 경우 북한의 7.1조치와 유사한 가격 및 임금 현실화를 1978년에 단행한 다음, 1979년부터 금융개혁에 착수하였기 때문
- 최근 알려진 북한의 「중앙은행법」, 「상업은행법」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금융개혁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
- 이에 북한의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령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금융개혁의 현황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.

II. 북한 사회주의 금융제도의 특징

□ 유일적 자금공급체계

-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기업 등의 모든 투자자금은 국가예산(재정)에서 중앙은행을 통해 독점 공급
- 생산 수단이 원칙적으로 집단(국가) 소유이고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
- 금융이 생산자금 동원 및 분배에 있어 독립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못하고 국가계획에 의한 자금 동원 및 분배를 담당하는 재정을 보완해주는 수동적 역할만 담당
- 주민들의 유희자금 동원, 기업 등의 일시적 자금 과부족 처리 등 극히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자본주의 국가의 금융에 비해 기능이 미약

□ 단일은행제도(monobank system)

-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자금 동원 및 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나의 국가은행(중앙은행)이 국가계획에 의거 자금 공급을 독점 수행하는 소련식 단일은행제도를 채택
- 북한은 '45년 은행 국유화 이후 단일은행제를 추진하여 1964년에 완료¹⁾, 내화(북한 원화)는 조선중앙은행이 외화는 조선무역은행이 관리하는 체제로 정착

1) 북한은 '1964년부터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국가자금을 통일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세웠다'고 주장(사회과학출판사, 재정금융사전, 평양, 1995, p847)

- 조선중앙은행은 통화 발행, 통화량 조절, 국고 업무 등 일반적인 중앙은행 기능뿐만 아니라, 북한통화 여·수신 등의 상업은행 업무도 독점 수행
- 한편, 대외거래와 외환업무에 있어서는 조선무역은행이 국가의 외화 수입과 지출 관리, 환율 및 외화이자율 제정, 기업 등 대상 외화 예금 및 대부 등 조선중앙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
- 이외에 대성은행, 금강은행 등 대외거래전문은행은 노동당, 군부 등 특정부문의 외화관리 업무를 수행

□ 화폐에 의한 통제

- 북한에서 은행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기업 등에 공급되는 자금이 국가계획에 맞게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
- 자금흐름 통제를 통해 실물경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북한에서는 ‘원화(화폐)에 의한 통제’라고 부르며 사회주의 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강조
- 은행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자금을 통일적으로 공급하는 일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해 기관·기업소 재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²⁾
- ‘원화에 의한 통제’는 유일계좌 원칙과 국가재산 등록·관리를 통해 실효성 확보가 가능
- 유일계좌 원칙이란 모든 기관·기업소·단체는 은행에 1개의 계좌만을 보유하고 모든 수입·지출은 이 계좌를 통해 결제해야만 한다는 원칙
- 이외에 모든 기업 등의 ‘고정재산(생산수단)’은 은행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함으로써 ‘원화에 의한 통제’를 뒷받침

2) 재정금융사전, p848

Ⅲ.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금융개혁 필요성

1.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상업은행제도 도입 배경

□ 7.1조치와 경제관리시스템의 변화

-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기업 등의 투자, 생산이 국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,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도 국가가 회수하여 재분배
 -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 붕괴로 국가의 자원 동원 및 분배 능력 상실로 계획경제가 붕괴된 상태에서 기업, 주민 등 경제주체가 계획이외의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여 비계획 부문이 확대
-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이미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진행된 시장경제적 요소를 제도권내로 수용,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
 - 북한은 현재 경제분야에서 “국가 계획과 가격에 따라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계획경제부분과 함께 기업소들 사이에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경제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새롭게 생겨났으며, 이를 계획경제와 어떻게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”³⁾로 인식
 - “모든 경제사업을 통일적 지도를 통해서만 진행하려는 편향을 극복하고 가격과 생산, 유통분야에서 국내외 시장을 적극 이용”하려면 “계획적 경제관리와 상품화폐관계의 이용을 옹계 결합하는 것이 중요”⁴⁾하다고 인식
-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계획부문과 비계획부문의 공존, 나아가 비계획부문의 활력을 활용한 경제활성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경제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
 - 이에 따라 2002년 7.1조치를 단행하여 가격·임금·환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분권화, 시장화, 화폐화를 기조로 경제관리시스템을 개선중

3) 윤재창, “현시기 경제관리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가지 문제”, 사회과학출판사, 사회과학원 학보, 2007년 1호, p16

4) 조선로동당출판사,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, 2005, p(민족21, '07.6, p17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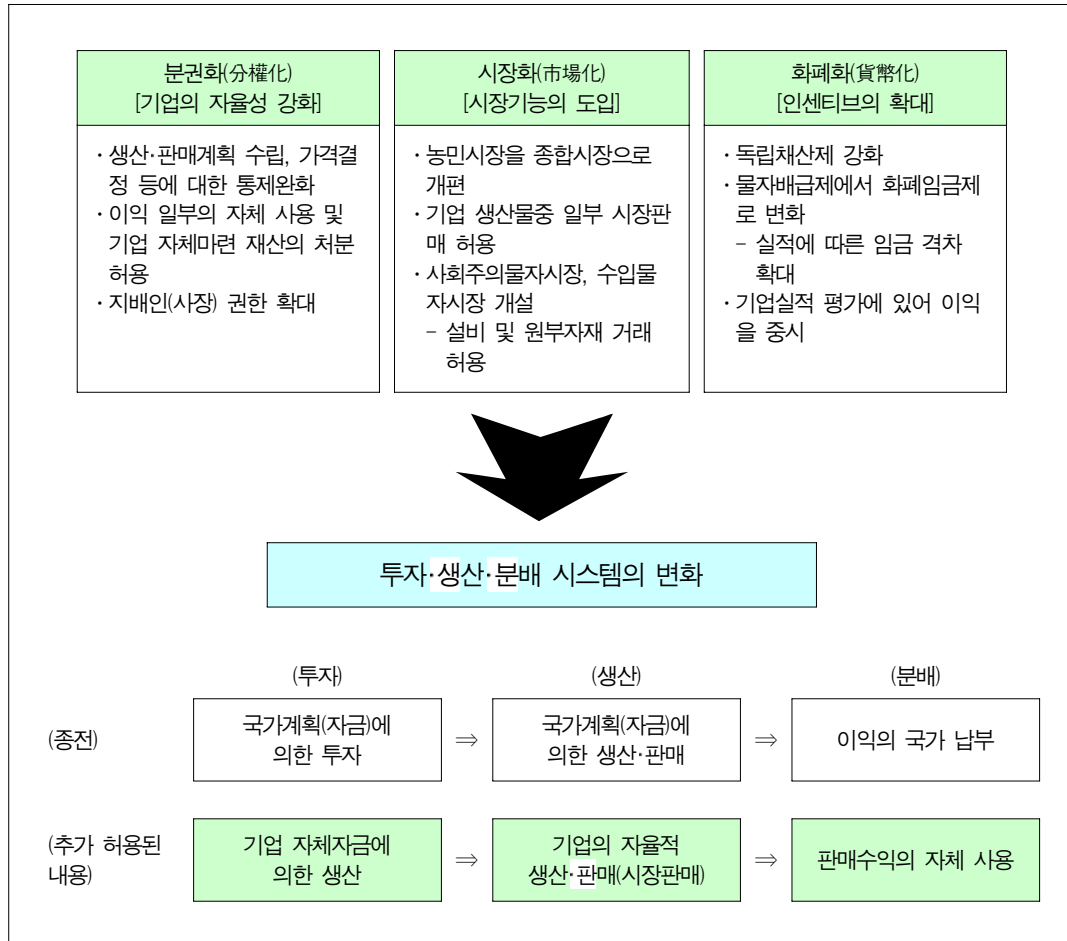
□ 상업은행제도 도입의 배경

- 이와 같은 경제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기업 등의 자금 조달 및 사용에도 변화를 초래
 - 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기업의 자체자금에 의한 투자·생산과 수익 일부를 자체사용을 허용하는 수준까지 진전
- 기업의 자산중 국가 투자를 받은 자산과 국가투자 없이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자산을 구분
 -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금 납부 면제, 판매 수입금 자체사용 허용하고 있으며,
 - 특히 국가투자를 받지 않고 생산,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·기업소·단체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납부금을 감면해주는⁵⁾ 등 자체자금에 의한 생산, 투자활동을 유도
- 또한 기업 등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산 정상화를 위해 “공장, 기업소들이 자체적으로 밑자금을 마련하여 이용”⁶⁾할 것을 요구
 - ‘밑자금’이란 ‘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공장, 기업소들이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밑천’이라고 정의
 - ‘밑자금’중 ‘생산정상화몫’은 “누가 무엇이랴 하든지 무조건 뚝 떼놓고 어느 누구도 다른 데 쓰지 못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, 그에 대한 이용은 철저히 해당 공장, 기업소만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여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생산정상화 및 투자자금을 조성, 이용하는 것에 대한 침해를 제한
- 상업은행제도는 이러한 자체자금 조성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
 - 전에 비해 화폐, 이익 등을 강조하는 경제관리시스템 도입에 발맞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

5) 국가예산수입법(2005.7.6 제정) 제27조, 제30조, 제45조

6)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해설, (민족21, 162~163)

【7.1조치와 경제관리시스템의 변화】



2. 금융개혁 관련 동향

□ 자본주의 금융제도 조사·연구

- 북한의 금융개혁은 돌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뉘대로 준비를 거쳐 이루어진 조치로 추정
- '97년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해외에 연수생 파견을 시작하여 산업시찰·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

- 특히, 2001년 이후부터 재정, 금융, 회계 등으로 연수분야를 확대하여 금융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지식 습득에 노력
- 2002년에는 조선중앙은행 등 금융 담당자를 중국의 국영은행(중국은행, 공상은행 등)에 파견, 중국의 금융개혁에 대해 조사·연구
- 이후 독일의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, 한스자이델재단 등과 공동으로 국제금융, 시장경제 금융제도 등에 대한 세미나 등을 실시, 국제금융시스템 및 시장경제 금융제도에 대한 지식 습득에 노력

금융관련 조사연구 동향

시기	북한기관	장소/해외기관	내용
'01.2	조선중앙은행 등 5명	워싱턴/워싱턴대학	경제, 금융관련 연수
'01.4	사회과학원 등 10명	상해/아시아 재단	조세, 회계, 금융 연수
'02.8	조선중앙은행 10명	북경/중국국영은행 등	중국 은행제도 조사
'04.3	북한 연구소, 학자 등	평양/독일나우만재단	시장경제 회계제도 세미나
'04.6	조선중앙은행 등	평양/독일한스자이델재단	국제금융 세미나
'04.9	중앙은행, 무역은행 등	이탈리아 개발협력처	금융분야 연수
'04.10	조선무역은행 등	평양/독일나우만재단	시장경제 금융제도 세미나
'05.9	경제, 재정전문가 10명	독일/독일나우만재단	시장경제 재정, 금융 연수
'06.3	재정성 등	독일	정부회계와 은행 기능 등

자료 :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

□ 법·제도 측면의 개혁

- 2002년 7.1조치로 가격·임금 현실화, 환율 평가절하, 외화교환권 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
- 7.1조치후속으로 자본주의 금융 및 중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조사·연구를 통해 금융관련 법·제도 정비에 착수
- 2003년 「회계법」을 제정하여 복식부기원리 도입을 추진하고, 2005년 「국가예산수입법」을 제정하여 기업 자체자금에 의한 생산설비 마련 및 처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- 아울러 2004년 「중앙은행법」, 2006년 「상업은행법」 등을 제정하여 상업은행제도 도입 등 금융개혁을 추진중

재정·금융 제도개혁 동향

주요 조치	연도	내 용
SWIFT 가입	2001	• 현재 18개 은행 가입
금융 전산화	2001	• 금융 전산망 구축 시작
7.1조치	2002	• 가격 및 임금 현실화, 환율 평가절하(1달러당 2원 → 150원), 외화교환권(외화바꾼돈표) 폐지
「회계법」 제정	2003	• “부기” 대신 “회계”라는 용어 사용, 복식부기 도입
공채 발행	2003	• 해방 이후 최초 발행(재정적자 해소 목적)
외화교환소 설치	2003	• 개인보유 외화를 시장환율로 교환
「중앙은행법」 제정	2004	• 중앙은행의 조직, 기능 등을 법제화
「국가예산수입법」 제정	2005	• 기업의 자체마련 설비에 대한 처분권 인정 허용 - 판매수입의 자체사용, 감가상각비 징수 면제 * 합영기업의 경우 이익배당금의 25%만 국가 납부
「상업은행법」 제정	2006	• 상업은행의 설립, 업무, 감독 등을 법제화
「대외결제은행 돈자리규정」 제정	2006	• 무역은행 이외 대외결제은행에도 외화계좌 개설 허용 - 무역은행은 모든 외화계좌 등록 및 감독통제

IV. 상업은행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기능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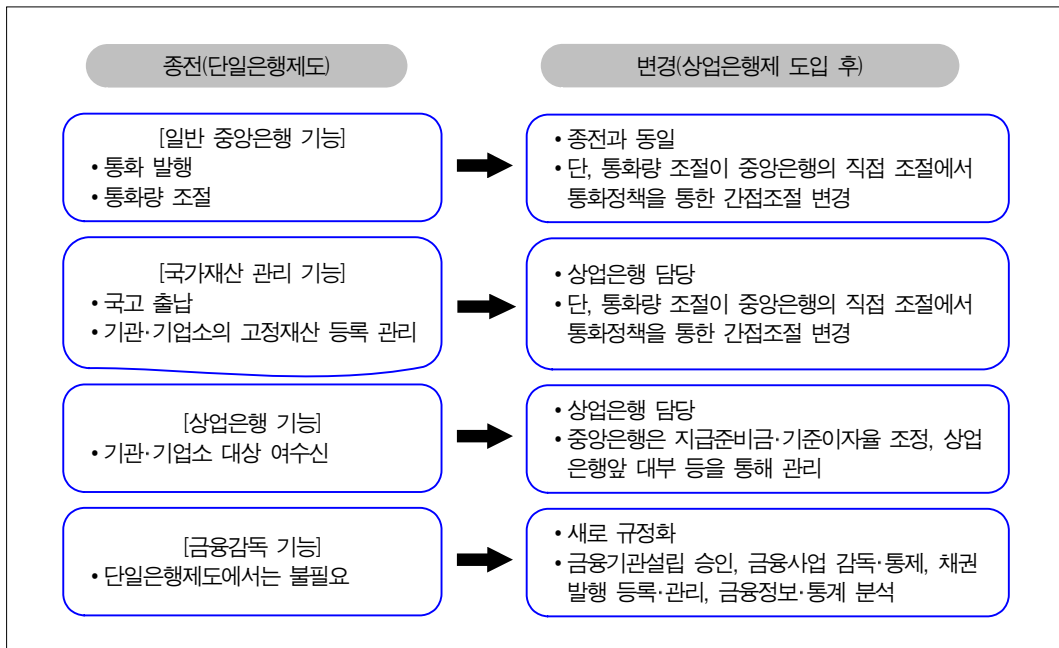
1. 조선중앙은행/조선무역은행

□ 조선중앙은행

- 중앙은행의 주요기능이었던 기관·기업소를 대상 여수신 업무가 중앙은행법에서 없어지고 그 대신 상업은행법에 상업은행의 기능으로 명시
- 그 대신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 및 금융 관리·감독 기능에 초점을 맞추도록 역할이 변경

- 이에 따라 통화량 등 금융관리 업무가 종전에 중앙은행에 의한 직접 관리에서 상업은행을 통한 간접관리로 변화를 예고
 - 중앙은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화폐발행규모 및 화폐유통계획을 국가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내각에 대해 책임
 - 통화량은 ①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적립, ②금융기관에 대한 대부, ③금융기관과의 귀금속·증권 등의 매매 등을 통해 조절
 -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기준이자율과 변동폭을 정하고, 그 범위내에서 상업은행이 여수신 이자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제한
- 종전 단일은행제도에서 금융감독 기능이 중요하지 않았으나, 상업은행제도 도입으로 금융감독 기능을 새로이 규정화
 -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설립 승인,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, 채권 발행 등록, 금융정보 교환 등의 업무를 신규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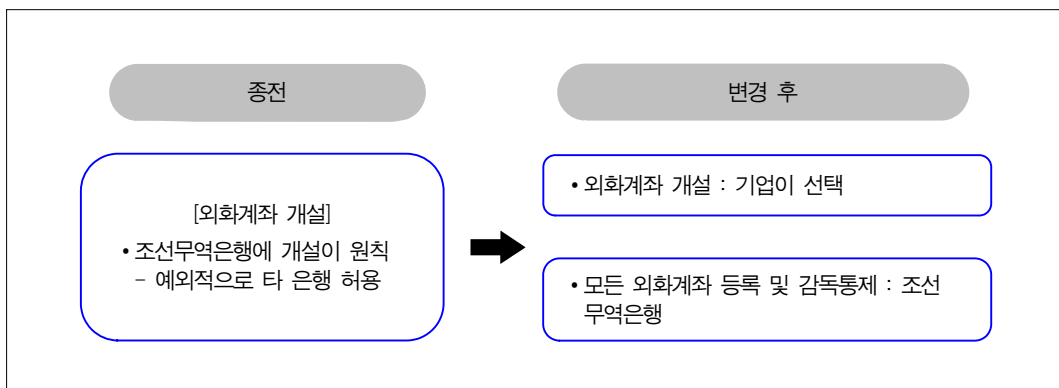
상업은행제도 도입후 조선중앙은행 기능 변화



□ 조선무역은행 : 외화계좌 개설 업무가 상업은행으로 확대

- 상업은행제도 도입으로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조선중앙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했던 조선무역은행의 기능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
 -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조선무역은행법도 새로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,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음.
 - 다만, '06년 11월 제정된 '대외결제은행돈자리규정'은 무역은행 기능 변화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음.
- 대외결제은행돈자리규정에 나타난 무역은행 기능은 기업 등의 외화계좌를 직접 개설·관리하는 대신 '대외결제은행 지도기관'으로서의 역할에 초점
 - 기존 외화관리법 및 시행령('02년 개정)에는 기업 등의 외화계좌는 원칙적으로 무역은행에 개설하되, 여타 대외결제은행에 개설할 경우 별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
 - 그러나 대외결제은행돈자리규정에서는 기업 등이 조선무역은행 이외의 대외결제은행에도 승인없이 외화계좌를 개설토록 허용하는 대신, 대외결제은행에 개설하는 모든 외화계좌는 조선무역은행에 등록토록 규정하여 대외결제은행 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

상업은행제도 도입후 조선무역은행 기능 변화



2. 상업은행 - 「상업은행법」 내용을 중심으로

□ 상업은행의 기능

- 상업은행법 적용대상은 북한 영역내의 상업은행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, 특수경제지대에 설립되는 은행과 외국투자 은행은 상업은행법이 아닌 해당법규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업은행법 제정이 내부용 목적임을 시사
- 상업은행은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갖고 재산제로 운영하되, 내각의 지도밑에 조선중앙은행의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규정
 - 상업은행은 북한의 기관, 기업소, 단체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며, 통합이나 해산의 경우도 마찬가지
- 상업은행의 주요 업무는 ①기업 등의 계좌 개설 및 입출금, ②여·수신 및 보증, ③대내외 결제, ④외화 교환 및 매매, ⑤금융채 발행 및 매매 등
- 상업은행 대출자금의 원천은 ①자기자금, ②예금, ③중앙은행 차입금으로, 이들 금액의 합계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
 - 대출 방식은 ‘담보 또는 보증’ 대출이 원칙으로, 담보는 차입자가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동산 또는 부동산이 대상이며, 보증은 지불 능력이 있는 제3자 또는 차입자 상급기관의 서면 보증을 요구
 - 대출에 있어 기업 등의 자산담보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상업은행 설립 목적이 기업들의 자체자금에 의한 투자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시사
 - 다만 차입자의 상급기관 보증이 있는 경우 대출이 가능토록 한 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의해 상업은행이 부실화될 여지
- 이외에 거래자의 경영상태 자료를 제출받아 제3자 대상 신용확인 또는 보증을 하거나, 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각종 채권과 외화 매매도 가능

□ 상업은행 설립 전망

- 현재 북한에서 상업은행 설립 여부 및 중앙은행이 취급하였던 여수신의 상업은행 이관

- 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.
- 중국의 경우 중국인민은행에서 중국은행, 농업은행 등 전문은행의 분리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, 그 이후 부문별 은행들이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수순으로 상업금융제도가 도입
 - 중국은 일관된 개혁·개방 의지 표명, 개혁·개방을 통해 축적된 민간자본, 활발한 외국인 및 해외 중국교포들의 투자,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비교적 순조롭게 상업은행 제도를 도입
 - 북한의 경우는 중국에 비해 제반여건이 열악하여 상업은행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
 - 대외관계 악화로 인한 외국인투자 부진, 경제침체 지속, 자본축적 미약 등 경제여건 미비
 - 북한주민 등의 북한 통화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상실, 이자율·환율 등의 이중구조(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), 은행이 보유한 기업들의 부실채권 등 열악한 금융환경
 -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제도 도입은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맞물려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입한 조치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
 - 그러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상업은행의 본격적 설립은 다소 지연되거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 -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 등의 신규 자본형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권력기관 등이 설립한 외환 전문은행 및 합영은행 등을 중심으로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상업은행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음.
 - 상업은행이 내화 뿐만 아니라 외화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

V. 북한 금융개혁의 평가와 전망

1. 북한 금융개혁의 평가

□ 상업은행제도 도입의 의의

- 북한에서 금융은 경제관리 및 통제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북한의 금융은 ①유일적 자금공급체계, ②단일은행 제도, ③화폐에 의한 통제라는 특성을 있음.
- 상업은행 제도의 도입은 북한 금융의 특징중 유일적 자금공급체계와 단일은행제도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는데 의의
 -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핵심 요소인 중앙집권적 자금관리시스템의 해체를 의미하며, 나아가 재정으로부터 금융의 독립, 화폐중심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의미
- 아울러 상업은행이 내화 및 외화를 동시에 취급하게 됨으로써 종전에 적용되던 원화금융과 외화금융의 엄격한 분리가 완화되었다는데 의의
 - 이는 북한의 은행들도 향후 해외경제에 대한 민감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

□ 상업은행제도 도입의 한계

- 상업은행 제도의 도입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획기적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, 상업은행법 등에는 사회주의 금융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‘원화에 의한 통제’ 등 사회주의 금융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은 한계
- 현재 남아있는 사회주의 금융의 통제적 요소로는 기관·기업소·단체는 1개 계좌만 보유해야 하는 유일계좌 보유의무(제30조)와 기업 등의 고정재산을 은행에 등록해야 하는 생산수단 등록의무 등이 있음.

□ 금융개혁의 현주소(중국과 비교시)

- 중국은 1978년 북한의 7.1조치와 유사한 가격 및 임금 현실화 조치를 단행하고 1979년부터 중앙은행법 개정준비와 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시작

- 중국은 1995년에 「중양은행법」 및 「상업은행법」을 제정하였지만 단일은행제도 해체는 개혁·개방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
중국 개혁·개방과 금융개혁

- 1978 개혁·개방 시작
- 1979 국영 전문은행 설립 시작(농업은행, 중국은행 등)
- 1983 중국인민은행이 중양은행 업무만 취급토록 결정
- 1986 「은행관리 임시조례」 제정 - 인민은행 및 전문은행 업무 규정
- 1995 「중국인민은행법」, 「상업은행법」 제정

- 북한이 「중양은행법」 및 「상업은행법」을 제정하였지만, 중국의 1995년 「중국인민은행법」 및 「상업은행법」과 비교하면 북한법은 사회주의 금융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
- 중양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의 분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1980년대 초반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

2. 향후 전망

- 중국의 경우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·개방이 가속화된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서도 상업금융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
- 향후 북한 기업들의 생산자금 조달·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제고되어 경제의 분권화, 시장화, 화폐화가 진전되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돌이킬 수 없는 기조로 정착될 전망
- 아울러 기업 자체자금 및 상업은행 대부 등으로 인한 신용창출이 확대될 경우 북한경제의 활성화에도 제한적이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**R**